

법사위 '대장동' '도이치 주가조작' 총돌

민주 "이재명, 그분 아냐"

국힘 "유동규,李의 계슈타프"

여야는 14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상대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야당과 브로커들이 결탁한, 전관들이 있는 (대장동) 사건을 정말 철저한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말한 '그분'과 관련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온 이를 이니셜로 부르거나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맹목에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검찰쿠테타 세력 몰락의 서막"이라며 "이들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 오늘 유죄로 단죄받은 것"이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징계) 내용대로라면 다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며 "장모는 나랏돈 빼먹은 죄로 구속, 부인은 주가조작, 본인은 고발 사주에 화천대유 등 검찰의 호봉 낮은 후배들이나 수사관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위가 거론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고발 사주 관련된 것도 야당과 협잡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하고 양심에 털난 행동을 하면서 도리도리 부인만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신속히 이재명 후보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씨가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상범 의원도 "유

동규는 이재명의 계슈타프(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공 김씨 트위터 사건 때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이재명 지사 주변에서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성남시청은 청와대냐"고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를 겨냥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을 특정인 7명에게 몰아주고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뻔뻔하게 우겼던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한다"며 "설계 자체가 배임에 해당하면 설계자는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서울대 단과대별 근로자 환경 등 제각각

서동용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소속 단과대별로 근로자들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서울대학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속에 따라 근로 정년, 휴가, 휴직, 육아단축근로 등 근로환경이 제각각 다른 조건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총장 발령 직원'과 '기관장 발령 직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총장이 법인직원과 일부 자체직원을 임용하고, 서울대학교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대부분의 자체직원을 임용하는 체제이다. 이런 이원적인 구조 속에 총장 발령 직원과 기관장 발령직원의



취업규칙 역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속별 경조사휴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장 발령 직원 취업규칙과 각 단과대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상황별 경조사 휴가 일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또 배우자가 출산하면 총장이 임명한 자체직원은 10일 휴가를 받고, 공과대학은 5일, 치의학 대학원 소속 직원에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원들의 정년에도 단과대별 정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총장이 임명하는 자체직원, 치의학 대학원 직원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인 반면, 공과대학·법과대학 등 소속 직원은 정년이 만 55세로 적용받는다.

편법 농지투기 이용 임대수탁사업 보완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편법으로 농지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경할 수 없다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사용대를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징집·취학 등으로 농사짓기 곤란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60세 이상 고령 농



민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임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수탁 가능 농지의 기한 제한이 없어 자경 목적으로 취득 후 단시일 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함으로써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6년~2020년 중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계약제결 내역을 분석했을 때, 총 임대수탁 농지는 6만675ha이며, 취득목적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4만9940ha로 그 중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위수탁한 농지는 1만744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설계 잘못 무용지물 배수펌프장 297개

서삼석 국회의원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이 전국에 2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유류 배수펌프장 침수현황'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폭우로 인해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다.

펌프장은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781ha(236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2년간 피해액은 펌프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비 267억원 등 총 285억원이다. 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침수피해 이



후 2005년부터는 펌프장 위치를 제방 이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다.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638개소 중 현재까지 341개소에 대해서는 높이를 올리는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삼석 의원은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설계 잘못 펌프장 307개소에 대한 개선공사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올려 짓는 사업이 완료되어 10월 현재 297개소가 남은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15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74, 경북 41, 전북 24, 전남 16, 충북 10개소 순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감 대책회의의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 징계정당' 판결에 "사필귀정... 후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만큼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한다"며 "윤 전 총장 징계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는데 이런 사유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졌다"며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 대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 강력하게 징계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라며 "윤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계 신동근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가 자문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징계를 이유로 총장직을 사퇴했는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퇴 명분이 사라졌다"며 "징계는 핑계에 불과했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게 아닌가"라고 썼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법무부가 징적 2개월 징계를 의결하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 style="font-size: x-small;">(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large;">010-6670-98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large;">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large;">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large;">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large;">010-6670-9800</p>